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12
----------	-------

발의연월일 : 2025. 4. 25.

발 의 자 : 한창민 · 윤종오 · 용혜인
황운하 · 서미화 · 김준형
전종덕 · 백승아 · 김종민
신장식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
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
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
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
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 ③ (생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 ----- ----- -----.
<u><신 설></u>	1.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u><신 설></u>	2. <u>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